# 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608호 | 202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값 1,000원

후원 계좌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내란 청산과 조희대 탄핵 논란 2면

극우와 이주민 차별 3면

팔레스타인 서안, 기승 부리는 폭력 4면

트랜스젠더 청소년 인터뷰 9~10면

프랑스인 유학생이 말하는 프랑스 반란 11면

이란 전쟁 참전 입법 반대 12면






여성 대상 폭력과 해방의 조건 5~8면


# 이란 전쟁 참전 입법 중단하라


관련 기사 12면




## 내란 청산 방해 선봉장이 된

# 조희대는 제거돼야 마땅하다. 다만...

김문성

11월 19일 대법원은 스스로 내란 청산의 최대 방해자임을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내란죄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내란)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덕수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적법 절차를 제시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내란 동조라 볼 수 없고 별도로 국헌 문란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황 증거와 사실 증거 모두를 외면한 판결이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다수 견해가 한덕수의 내란 동조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반대(소수) 의견"을 제출했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 그래서] ... 그 단죄가 쉽지 않다. ... 쉽게 은폐되고 시민들의 눈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내란행위자의 집권 [기간에] ... 증거들은 인멸되고 소실[된다.]"



사진 이미진

박근혜·윤석열 파면은 커다란 퇴진 운동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이런 친위 쿠데타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이전보다 더 엄격한 유죄 요건("국헌 문란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넘어 최소한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을 제시하고는 이것이 물증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정상적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었으며 이미 증거 인멸이 꽤 자행된 후 벌어지는 내란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조희대) 라는 판결 기조는 쿠데타 가담자 재판에 대한 최대 관용을 뜻한다.

이런 판결 기조로 이미 계엄군으로 국회·선관위·민간시설에 출동한 군 지휘관 8인, 경찰·검찰 고위 간부, 추경호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한덕수 판결로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의 기조였음이 확실해졌다.

한덕수는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에 이미 윤석열에게서 포고령을 받아 읽어 봤다. 포고령은 국회를 정지시키고 일체의 시위와 파업을 금지했다. 이 포고령이 위헌·위법 판결을 받지 않는 방법은 쿠데타가 성공해 정치적 반대파를 싹쓸이하는 길밖에는 없었다.

더 엄격해진 내란죄 증명 요건에 비춰 봐도 한덕수의 행위는 명백한 유죄인 것이다.("반대 의견")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은 눈가리고 아웅하듯 면죄부를 줬다.

## 조희대 대법원과 국힘은 한 편이다

대법관 내 "반대 의견"의 존재는 조희대 일파의 이런 반동적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보수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곧바로 도출된 결과가 아님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매우 의식적으로 극우파가 이끄는 국힘과 쿠데타 가담·방조 관료들을 돕고 있다. 그들의 판결 기조는 그 대법관들 자신을 포함한 많은 최고위 공직자들이 계엄 당시 취한 태도, 즉 부작위에 의한 쿠데타 가담·방조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예고돼 왔다. 헌재 심리 도중 윤석열을 기습 석방하고,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결사반대하고 비우파 대법관 임명을 막으려고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다.

그런 자들이 내란 청산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법원과 조희대를 옹호하고 있다. 장동혁은 조희대 탄핵이 "진짜 내란"이며 정권 퇴진으로 가는 길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번 한덕수 판결이 12·3 계엄이 내란임을 사실상 인정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대법원이 확실한 자기 편임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법원 극우파의 수장으로서 조희대를 반대하고 그 자리에서 숙정하라는 염원을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의 과도한 정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탄핵이든 뭐든 조희대 퇴진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한덕수 판결 후 신속하게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시키자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민주당이 일관된 투쟁을 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오히려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으로 이란 전쟁 파병 동의안 통과를 물타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좌파 진영에서는 조희대 탄핵을 앞장서 주장해 온 촛불행동이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진보당과 전국민중행동도 조희대 탄핵에 동의하고 나섰다.

## 보수적 헌정 절차 의존 말고 대중 동원을 하자

그러나 공식 정치 상층의 주도권이 국힘에게 넘어간 데다 윤석열 탄핵 때처럼 커다란 반극우 대중 운동도 없는 상황에서 조희대 탄핵이 역풍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회 탄핵을 관철할 것이라고 믿거나 민주당에 압박과 지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조희대 제거를 이루기 어렵다.

11월 30일 정기 회의가 예정돼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인 강동훈은 조희대 탄핵이 벌어지면 판사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들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중의 민주적 통제 염원으로부터 "독립"(비민주)함을 뜻하는 것이다.

강동훈의 선동은 민주당이 섣불리 국회 탄핵소추에 나서지 못할 것이고, 설사 나서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극우파 의원 김태규·김민전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떠든 것은 조희대 탄핵이 사기가 오르는 극우에 또 한 차례 급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조희대 제거 요구가 그럴싸한 탄핵 소추한 작성, 국회 표결, 헌재 심리와 결정에 중심을 두고 대중 동원을 부차화하면, 지난해 윤석열 탄핵 운동 때의 한계를 반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초 '헌재의 시간' 속에서 서부지법 폭동, 대통령 관저 옥쇄 투쟁, 윤석열 기습 석방 등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운동은 큰 위험에 처했다. 그 위험한 계기들을 간신히 돌파했던 것은 그때마다 거리를 채우고 거리 점거를 불사한 대중의 투지였다.

이런 대중 동원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조희대 탄핵은 말에 그쳐서 극우의 사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탄핵 절차를 통한 숙정의 어려움은 바로 기성 합헌 절차 자체에 있다. 그 절차는 애초에 국민 모두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중도적 정치 안정을 이루려고 설계됐기 때문이다.(대통령이 파면돼도 개인만 제거되고 그가 임

▶ 3면으로 이어짐

# 극우의 이주민 배척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벌어진 이재명의 이주민 비난 망언은 새삼 이주민 차별 문제와 "극우의 주류화" 문제를 환기시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익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종차별적 이주민 배척 선동 글은 계속 늘어 다수의 지위를 차지했다. 신자유주의 우파적 "공정" 담론의 인종차별 버전인 "내국인 역차별"론이 핵심 키워드였다.

그러나 그동안 인종차별적 이주민 혐오 악담들은 온라인 배설 문화의 일부로 여겨졌지, 국가적 공론장에서 다뤄질 정상 담론으로 취급되지는 못했다. 또한 한국 극우 운동은 정치 투쟁, 그와 연관된 "역사 전쟁"을 주력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재명의 이주민 비난 망언 이후 상황이 빠르게 달라질 듯하다.

이재명이 극우의 의제를 훔쳐 온 것은 지배계급의 여러 필요가 겹친 결과로 보인다.

첫째, 이주노동력 수요가 늘면서 관리·통제 강화 필요도 커진 것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재명은 민족주의적인 자국민 우선주의를 앞세워, 보수적 청년들 안에서 인기를 만회하려고 한다. '내국인 역차별'론을 훔쳐 온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주민 비난 편승은 이주민이 문제라는 극우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추인해 주는 효과를 낼 뿐이다. 극우는 자신들이 혐오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좋은 지적"으로 묘사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서 자긍심과 힘을 느끼고 극우 지지층은 더 공고해진다.**



사진 조승진

일관되게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반극우 운동이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도 2000~2010년대 대통령을 지낸 우파 사르코지, 사회당 올랑드가 집권 후 잇달아 이슬람 혐오에 따른 이주민 엄벌주의를 수용했다.

그런데 당시 국민전선 최고 지도자였던 마린 르펜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공화국의 대통령이 국민전선의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면이 있음을, 즉 국민전선에 대한 경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린 르펜은 지금 내년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 1위 후보다.

## 극단적 체제 수호

극우의 모순은 극우가 체제의 실패를 이용해 사람들을 포섭하지만, 그 실체는 극단적인 체제 수호 세력이라는 점이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인종차별(적 이주민 혐오)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고 긴축(복지 삭감)의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게 극우는 그 고통이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이주민·난민, 그들을 환영한 중도파·좌파 때문이라고 선동한다.

기존 "국가공동체"의 안정·안전, 도덕적 가치가 "자격 없는" 낯선 외부인들에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우리"가 사회의 본래 주인으로서 주권·영토·일자리·고유문화를 지키자고 선동한다.

이런 극우 담론은 위기 속에서 자존감이 추락한 사람들을 피해자라며 위로하고, 사회의 주인 지위를 되찾자는 사이비 위안을 동시에 제공해 포섭을 쉽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극우는 대중을 분열시키고 도덕적 공포를 이용해 권위주의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조장한다.

또한 국가 간 군국주의 경쟁의 격화도 배타적 국수주의(애국주의)와 이주민 배척주의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

정치·경제가 안보화되는 극심한 국가 간(국경으로 나뉜) 경제적·군사적 경쟁에 그동안 누려 온 또는 앞으로 기대할 번영의 유지가 달려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배타적 애국주의와 타국민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기 쉽다.

이런 배경에서 혐중과 이슬람 혐오라는 최신 인종차별주의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중동·중국과 맺어 온 경제 통합 때문에 그동안 주류 우파는 반중·혐중과 이슬람 혐오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기층 친미반중 극우를 중심으로 혐중(중국 국적자 혐오)과 이슬람 혐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여기에는 미국의 치열해지는 중국 견제, 이란 전쟁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독자적 반극우 운동

극우는 현재의 고통과 불만을 체제를 향한 투쟁에서 낯선 "타자(이주민과 소수자)"로 향하게 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진정으로 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노동계급은 국제적 계급이기에 더욱 그렇다.

좌파는 내국인 역차별론 등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당, 노동당 등은 극우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도 조선소, 돌봄 등 일자리 문제에서 이주민 채용에 반대하며 내국인 역차별론을 차용한 내국인 우선 채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특히 선거 공약) 이는 극우의 인종차별에 일관되게 맞서는 태도가 아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자는 좌파의 개혁 요구는 흔히 극우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바로 그 요구가 극우와의 타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유의 반극우 투쟁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반제국주의가 단지 방어적 일국주의 관점에서 수행된다면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극우의 체제수호적·반민주적·인종차별적 실체를 폭로하고, 노동계급 내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인종차별주의 편승에 맞서 싸우며, 극우에 맞서 사람들을 결집해 행동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김문성

▶ 2면에서 이어짐

명한 행정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도 연관된 한계다.)

헌재는 (세력 균형에 발맞춰) 박근혜·윤석열을 파면하면서도 탄핵 심리를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한덕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도 그 사례다.

민주당이 한덕수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을지 말지로 오락가락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실 한덕수 판결이 탄핵소추의 사유라면, 대법관 9인이 모두 탄핵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코 인용되지 못할 것임은 누구나 안다.

그렇다고 정의당처럼 사법부에 대한 다수당의 횡포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대법 판결을 규탄하면서도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논리는 헌정 절차의 중도적 보수성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이 위기에 처한 지금, 조희대 퇴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현재의 판 전체를 흔든다는 각오로 덤벼들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투쟁은 과해서가 아니라 너무 미약해서 문제였다. 민주당은 임기 초 조희대 탄핵의 적기를 놓쳐 버리고, 이후 내란특별재판부법, 대법관 임명 등 법원을 향해 그 무엇도 관철하지 못했다. 바로 그런 기회주의가 최근의 잇따른 내란 관용 판결과 국힘 원기 회복에 자양분이 됐다.

따라서 좌파는 대중의 조희대 제거 염원을 지지하되, 민주당과 탄핵 절차에 의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반극우 대중 동원을 일으켜야 한다.

용어설명

**미필적 인식**

그동안 국가보안법 판결에서는 "이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유죄 처벌돼 왔다. 대법원은 친위 쿠데타 재판에 와서야 목적범 유죄 판단에 더 엄격한 법리를 도입한 것이다.



사진 출처 Eye on Palestine / X

##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 이스라엘 정치 위기 속에서 또다시 고조되는 정착자들의 공격

11월 22일 이스라엘인 정착자들이 서안지구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자행했다. 이 극우 깡패들은 주로 라말라와 헤브론 남부 구릉 지대 일대에서 밤사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했다.

정착자들은 주택 벽에 인종차별적 문구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휘갈겨 쓰고, 집을 부수고, 차량을 불태웠다.

테러 국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종학살을 시작한 2023년 10월 이래 점령지 서안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인 정착자들의 공격이 급증했다. 그 기간 동안 정착자들과 이스라엘군이 어린이 255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222명을 죽였다.

2025년 7월 이스라엘인 정착자 이논 레비가 팔레스타인인 활동가 아우다 하탈린을 죽였다. 하탈린은 다큐멘터리 〈노 아더 랜드〉 제작에 자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주 레비는 하탈린을 살해한 현장인 헤브론 남부 구릉 지대의 움알카이르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

아우다 하탈린의 유족 이드 하탈린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전했다. "레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알카이르 땅에 새 정착촌 전초 기지들을 짓고 있어요.

"법이 이런 식입니다. 법이 정착자들의 범죄를 도우니 정착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8월 레비는 무모한 행위에 의한 치사, 무기 소지 무단 침입, 고의적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인종학살이 시작된 이후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정착자는 레비가 처음이다.

이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 내내 레비는 단 하루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레비는 헤브론 남부 구릉 지대와 마사페르 야타 곳곳에서 수많은 정착촌 전초 기지를 짓는 일을 거들었어요.

"체계적 인종차별이 점령지의 사실상 유일한 법입니다. 약자들은 정의를 누리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숨은 존중받지 못하죠.

"레비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체제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정착자들은 매일 우리를 괴롭히러 와요. 오늘도 그들 때문에 올리브를 수확하지 못했어요."

유엔은 10월 1~26일 서안지구에서 정착자들의 공격이 하루 평균 약 15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안지구 곳곳에 400개 넘는 불법 정착촌과 전초 기지가 있고 그곳에 75만 명 넘는 정착자가 살고 있다.

움알카이르에서 가장 가까운 정착촌은 1981년에 건설된 인구 약 700명의 정착촌 카르멜이다.

2011년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는 카르멜의 "으리으리한 전원 주택들"과 움알카이르 주민들이 사는 양철 판잣집의 뚜렷한 대비에 관해 언급했다.

그런데도 올해 초 이스라엘군은 아우다 하탈린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축구장을 "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아우다 하탈린의 또 다른 유족 마흐무드 하탈란 씨는 이렇게 전했다. "이곳의 삶은 비참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자를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착자들은 움알카이르 마을 인근에 새 전초 기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전 전초 기지는 마을에서 3~5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새 전초 기지는 더 가깝고, 거의 완공됐습니다. 불도저도 더 많이 들여왔어요.

"자기 땅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처지를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밀어요."

## 아이젠코트

10월 말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정착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가디 아이젠코트는 베냐민 네타냐후에 맞선 "야권" 연합을 이끌었다. 아이젠코트에게 주어진 새 정부 구성 시한은 12월 6일까지다(14일 연장될 수도 있다).

11월 22일, 아이젠코트의 야샤르당과 네타냐후의 리쿠드당 대표단이 협상을 시작했다.

아이젠코트는 정착자들의 공격이 "어떻게 봐도 유대인 테러이고, 마땅히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젠코트는 네타냐후와 손잡은 두 극우 정당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서안지구에서 주도한 행위들 때문에 이 지역은 통제 불능의 무정부 상태 직전까지 내몰렸다."

벤그비르는 아이젠코트의 정착자 폭력 비판이 아랍계 정당들에 지불한 "보증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아이젠코트의 연합은 거국내각을 원하는 측과,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을 연정에 끌어들이려는 측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아랍계 정당들은 사상 최대인 19석을 얻었지만, 아이젠코트의 야권 연합에서 아랍계 정당들과의 연대를 지지한 정당은 하나뿐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당들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착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서 한뜻이다.

아이젠코트는 지난해 스모트리치가 공개한 서안지구 정착촌 확장 계획인 'E1 계획'에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강탈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계획이 서방에서 반발을 자아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달 초 영국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는 기업 8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압박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가 '두 국가 방안'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고 우려한다. '두 국가 방안'이라는 그 기만적인 방안 덕에 서방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면서도 언젠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제재를 부과하기 바로 전주에 알자지라는, 정착촌과 연계된 기업들이 영국에서 1,000만 파운드(약 175억 원)가 넘는 규모의 공공 계약을 따냈다고 폭로했다.

그 계약 내역은 노동당 정부가 정착촌과의 무역을 제재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공개됐다.

식민 정착자 국가 이스라엘 내의 분열은 이스라엘 정치의 위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 차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빼앗을지를 둘러싼 것일 따름이다.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및 교역 전면 중단을 계속 요구하며 압박하자.

**준 버드**

출처 June Budd, 'Fresh settler violence in the West Bank as crisis continues in Israeli politics' (2026. 11. 22) / 번역 김준효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 《이스라엘에 대한 열 가지 신화》 저자

시온주의에 맞서 온 유대인 역사학자 일란 파페 방한 강연

가자가 뒤흔든 세계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프로젝트와 그 위기



일시 12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종각역 교원챌린지홀

- 한국어, 영어, 아랍어 통역 제공 - 참가비: 20,000원 (학생/난민 15,000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2846-1948 | palestine-solidarity.or.kr



# 여성 대상 폭력과 해방의 조건

**최일붕**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

여성이 배우자에게 맞고,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박받고, 거리에서 정치적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일(관련 기사: 본지 605호 '여성들의 표현 자유에 가해진 젠더 폭력')은 서로 동떨어진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성을 통제해도 되는 존재로 취급하고, 그 통제에 저항할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회관계가 이런 폭력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여성 대상 폭력에 맞서려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폭력이 반복되고 피해 여성이 벗어나기 어려운 조건을 바꿔야 한다.

이 글은 가정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협박·경제적 통제, 일터와 공적 활동에서의 공격, 국가의 방치와 구조적 방조를 중심으로 젠더 폭력을 살핀다. 핵심 논지는 분명하다. 여성의 안전은 소득과 주거, 돌봄과 노동권, 집단적으로 저항할 자유와 연결돼 있다. 이 조건들을 개인의 구매력과 가족의 지원에 맡기는 사회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계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여성 대상 폭력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가 재생산하는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에 도전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나쁜 남성'만이 아니다. 여성 차별에서 이득을 얻고 그 차별을 떠받치는 체제가 문제다.

## 여성 대상 폭력의 성격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 제35호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거나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폭력으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신체적·성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 피해, 협박과 강요, 자의적인 자유 박탈이 포함된다. '젠더 기반'이라는 말은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이하 성별) 관계 속에서 이해하자는 뜻이다. 성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취업을 막고 소득을 빼앗으며, 돈과 이동 수단을 통제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면 경제적 수단이 지배의 도구가 된다. 친구를 만나면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행위도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개별 행위가 남긴 상처만 살펴서는 이런 통제의 누적 효과를 간과하기 쉽다. 폭행이 없는 날에도 다음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도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 신상숙의 개념사 연구는 198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이 말이 여성의 다양한 폭력 피해를 묶는 데 쓰였지만, 1990년대 입법 과정에서 성적인 함의를 지닌 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의미가 정리됐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여성 대상 폭력을 성폭력의 문제로만 이해한다면, 성적인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폭행과 강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 불균형한 영향

그렇다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을 모두 성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누구를 골라 공격했는지, 어떤 힘의 불균형을 이용했는지, 여성에게 어떤 복종을 요구했는지 살펴야 한다. 가해자가 여성 비하 발언을 직접 했는지만이 판단 기준은 아니다. 정치적 적대나 금전 문제가 발단이 된 폭력에도 여성에 대한 선택적 공격과 통제가 결합될 수 있다. 젠더 기반 분석은 사건의 다른 동기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그 결합을 밝히는 작업이다.

직접적 폭력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관계도 구별해야 한다. 저임금과 주택난을 곧바로 구타와 같은 행위로 취급하면 구체적인 가해 책임이 흐려진다. 둘의 연결을 설명해야 한다. 낮은 임금은 별도의 거처를 구하기 어렵게 하고, 돌봄의 공백은 아이를 데리고 떠날 선택을 좁히며, 지원 시설 부족은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폭력을 행사한 책임과 이런 조건을 유지하는 책임은 구별된다. 물론 책임은 함께 물어야 한다. 후자의 책임은 임금을 억누르고 주거와 돌봄을 시장에 맡겨 이윤을 얻는 기업주들과,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정부에 있다.

##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는 지배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교제 중 폭력을 '연애 갈등'이라고 부르면 관계의 친밀함이 폭력을 가리는 가림막이나 면죄부가 된다. 동등한 사람들이 의견을 다투는 것과, 한쪽이 보복의 두려움을 이용해 다른 쪽의 선택을 빼앗는 것은 다르다. 관계를 끝낼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직장과 인간관계까지 통제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지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친밀 관계 폭력 연구의 피해자 면접에는 이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족·친구·직장 동료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일하는 동안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직장으로 전화하는 사례들이 있다. 헤어지자고 요구한 뒤 구타가 심해지고 가

▶ 6면으로 이어짐

▶ 5면에서 이어짐

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자가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사실을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이유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24년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적어도 181명이었다. 살인미수 등에서 살아남은 여성도 적어도 374명이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사건을 파악한 공식 통계가 아니라 보도된 사건의 최소 집계다. 이 보고서는 이혼·결별 요구와 재결합 거절을 가해자가 주장한 범행 이유의 하나로 제시한다. 관계를 끝내려는 선택 자체가 보복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폭력을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피해 여성에게 "왜 진작 헤어지지 않았느냐"고 묻는 말은 바로 이 위험을 간과한다. 헤어질 결심과 '자기결정'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아이와 가족을 위협할 수 있고, 당장 떠나더라도 생활비와 보증금이 필요하다.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결심, 물리적 분리, 생계 확보, 지속적인 보호가 함께 필요하다. 그중 하나라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른 조치의 효과도 약해진다.



사진 이미지

**돌봄을 떠맡는 여성들**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릴수록, 보육·돌봄 서비스가 부족할수록 여성들은 폭력에 취약해진다

'건전 재정'을 내세운 예산 삭감은 바로 이 고리들을 끊는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깎으려 한 것이 그런 사례다. 지원이 줄어들수록 여성은 위험한 관계를 떠나기 어려워진다.

결혼이주 여성에게는 체류의 불안까지 더해질 수 있다. 2019년 이혼한 한 베트남 여성의 계속 체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 유지에 체류 보장이 매이는 상황이 여성의 종속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폭력적인 관계를 끝내는 일이 강제 출국의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면 가해자는 국가가 만든 이주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를 자신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문제이므로 특정 문화권 남성의 성격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모든 여성에게 똑같은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평등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 통역이 필요한 여성, 시설에 사는 장애 여성, 소득과 돌봄을 혼자 책임지는 여성에게는 각각 다른 장벽이 있다. 혼인 여부나 국적, 가족 형태에 따라 지원의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실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 자본주의는 여성 차별을 어떻게 재생산하는가

여성 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다. 오늘날의 폭력을 자본주의와 연결해 파악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이 기업의 결정으로 발생한다거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히 해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성별 불평등이 현재의 생산과 생활 방식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이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노동계급 가족은 사랑과 위안을 나누는 곳이면서도, 노동력을 매일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을 떠맡는 제도이기도 하다. 식사와 청소, 아이와 노인의 돌봄을 개별 가구에 맡기면 기업과 국가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가 계급으로서는 여성의 무급 가사·육아 덕분에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역대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 위기'라 부르며 여성에게 출산과 돌봄을 떠미는 데에는 물질적 이유가 있다. 이 일이 여성의 당연한 책임으로 여겨질수록 여성은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을 함께 감당하고, 자신의 소득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가족 내부의 불평등은 임금노동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여성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노동시장과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기는 가족제도는 서로를 강화한다. 임금이 낮으니 여성이 일을 줄여 돌봄을 맡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돌봄 때문에 일을 줄였으니 낮은 임금과 승진 배제를 감수하라고 한다. 이 악순환은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을 높인다. 법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장벽이 여전히 있는 것도 이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여성 차별은 낡은 편견의 잔재가 아니라 이윤 체제에 득이 되는 구조다.

여기서 폭력은 여성 차별이 낳은 결과이면서 그 차별과 천대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폭행과 협박 때문에 취업이나 학업을 포기하면 독립할 자원이 더 줄어든다. 소득을 빼앗기는 여성은 일을 해도 떠날 돈을 모으지 못한다. 여성 노동자가 조직 활동에 나섰다가 모욕과 위협을 받으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할 힘도 약해진다. 폭력은 이미 존재하는 격차를 이용하고 다시 확대한다. 경제 위기와 생계 압박이 심해질수록 가정이 떠안는 부담은 커지고, 그 대가는 흔히 여성이 치른다.

빈곤이나 실업을 가해자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남성이 모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부유한 남성도 폭력을 행사한다. 사회적 조건은 개인의 행위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 동시에, 그를 처벌한 뒤 피해 여성을 같은 빈곤과 고립 속에 남겨 두는 것도 반쪽짜리 대응에 불과하다.

여성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모든 여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부유한 여성도 폭력을 겪을 수 있지만, 별도의 집과 법률대리인을 구할 자원이 있는 경우와 하루 소득을 잃으면 생계가 막히는 경우의 선택지는 다르다. 여성 경영인이나 정치인의 증가만으로 서민층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다. 지배계급 여성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에서 이득을 얻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계급 분석은 여성 차별의 중요성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원과 권력이 없는지 밝히고, 다수 여성의 삶을 바꿀 과제를 도출하는 일이다.



**여성들의 정치적 표현에 가해진 폭력** 10월 28일 홍대입구역

# 여성의 공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폭력

여성 대상 폭력은 여성을 집 안에 붙잡아 두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공격해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막기도 한다. 이런 폭력을 개인들 사이의 감정 충돌로 축소하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방식까지 간과하게 된다.

1978년 2월 21일 동일방직에서는 노조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려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 측 남성 노동자들이 분뇨를 뿌렸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호소문은 회사와 상급 노조,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이 자행됐다고 고발했다. 여성들의 몸에 모욕을 가하는 행위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와 결합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여성 멸시와 계급 지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게 맞물려 작용했다.

##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

2026년 10월 28일 홍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본지 보도와 피해자들의 공개 진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연대 등을 알리며 신문을 판매하던 여성들이 건장한 남성에게 장대로 맞고 위협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장에 남성들이 있었는데도 여성들이 공격 대상이 됐고, 남성들이 개입하면 물러났다가 다시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공격의 정치적 동기와 성별에 따른 표적 선택을 함께 조사해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상대의 정치적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여성에 대한 선택적 폭력을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대로라면 성별을 공격 대상 선택에 이용한 정치적 폭력으로 해석할 근거가 있다. 이런 공격이 용인되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넘어 다른 여성들의 거리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 여성 대상 폭력에 맞선다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집회하고 조직하며 논쟁할 권리를 지킨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사건 뒤 노동자연대 비회원·후원회원 지지자들이 같은 장소의 신문 판매에 함께 참여한 연대는 주목할 만하다. 함께 활동을 계속할 조건을 만든 것이다. 긴급 피난과 신변 보호도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일터와 거리의 활동을 안전하게 이어 갈 조건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는 연대다.

#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 폭력에도 맞서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는 국가 기관과 공무원의 폭력뿐 아니라 민간인의 폭력에 대해서도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설명한다. 곧, 국가에는 예방과 수사, 기소와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다. 위험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사적 폭력에 대한 국가의 방치와 의무 불이행에 책임을 묻는 원칙이다.

브라질의 마리아 다 페냐 사건은 이 문제를 보여 준다. 그는 1983년 남편의 살해 시도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오랫동안 실효성 있는 사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2001년 브라질의 사법적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 사건이 가정폭력을 묵인하는 차별적 양상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집안에서 일어난 폭력이라는 사실은 국가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를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립적 보호자로 여길 수는 없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경찰의 방관을 고발했다.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살해된 여성 역무원은 스토킹 가해자를 두 차례 고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2019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여성 대상 폭력에 항의하던 학생과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와 섬광탄을 사용했다. 여성의 안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질서 유지의 이름으로 공격받은 것이다.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집회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국가를 중립적 보호자라 부를 수는 없다. 경찰은 무엇보다 기존의 소유 관계와 질서를 지키는 기구이고, 그 질서에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형량 인상과 경찰 권한 확대를 여성 해방의 중심 전략으로 삼는 것은 지지하기 어렵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긴급한 분리와 접근금지, 보호조치의 실효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형벌을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피해자의 집세와 생활비, 돌봄과 치료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감옥을 채우는 것은 주로 서민층 사람들이고,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훨씬 많은 목숨을 앗아 간 기업주와 권력자들은 좀처럼 처벌받지 않는다. 국가의 강제력을 강화할 때는 그 권력이 노동자와 이주민, 항의하는 여성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따져야 한다. 지배자들은 강화된 권한을 여성을 지키는 데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써 왔다.

피해자 보호와 사실 확인을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서는 안 되며, 책임의 판단은 충실한 조사와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소하거나 끝까지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당하다. 일반권고 제35호도 법적 절차 개시를 보호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과, 피해자·증인·피고인의 적법절차상 권리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 8면으로 이어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or.kr/online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오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 7면에서 이어짐

# 선언을 넘어 권력구조와 사회관계를 바꾸기




사진 조승진

차별에 맞서는 집단행동이 중요하다

성평등 정책이 늘어나는 것과 여성이 실제로 안전해지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유엔 성평등 실행체계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감사 관련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 비율은 97퍼센트였지만 재정 배분 기준에서는 36퍼센트였다. 이 연구는 (제도적 성과와 담당자들의 협력도 인정하지만) 절차의 정착과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자동으로 함께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폭력 대응에도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와 보고서의 수를 늘려도 상담소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쉼터에 빈자리가 없다면 실제 보호는 취약한 것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과 안정적인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재벌·부자 감세와 국방비 증액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쉼터와 상담소 예산을 아끼는 것은 계급적 우선순위의 문제다. 성평등 사업을 없애거나 민간의 선의에 넘길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과 현장 활동가가 사업과 예산을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폭력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긴급 주거와 장기적인 공공주택, 생계 지원, 의료와 법률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옮겨도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이주 여성에게는 통역과 체류의 안정을, 장애 여성에게는 접근 가능한 시설과 활동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지원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관계를 지속할지 끝낼지 결정할 권리는 여성 자신에게 있다.

노동조합도 이 요구를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사하고 치료받으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와 긴급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적정 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위한 투쟁은 여성이 폭력적인 관계를 떠날 경제적 능력을 키우는 투쟁과 연결될 수 있다. 파업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이윤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기에, 여성의 요구를 관철할 실질적 힘이 된다. 민주노총은 가정폭력을 단순한 사적 문제가 아닌 노동권과 일터의 안전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요구와 의제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는 주로 단체협약(단협) 요구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운동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이 요구가 파업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지금 프랑스를 뒤흔들고 있는 학생과 노동자의 투쟁처럼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필리핀은 2004년 「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폭력 금지법」에서, 배우자·전 배우자·교제 상대 등 법이 정한 관계에서 폭력을 겪은 여성 노동자에게 기존 휴가와 별도로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했다. 보호명령에 명시된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안전을 위한 행동이 곧바로 소득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여성의 권리를 일터의 조건과 연결한다.

그러나 필리핀은 '종이 위의 법'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보적이지만, '현장의 집행'은 크게 뒤처지는 대표적인 나라다. 필리핀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매년 아시아 1~2위를 다툴 정도로 법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 비율도 높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공식 부문(영세·비정규·가사노동 등)에 속한다. 이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10일 유급휴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성은 공식 부문에 고용된 일부에 그친다. 더구나 2010년대 후반 두테르테 정권의 등장과 함께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극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득세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의 진보적 입법 성과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많이 가려졌다. 이는 법 조항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구조적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다.

## 집단적 투쟁

남성 노동자가 돌봄을 함께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일은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동일방직의 사례가 보여 주듯 성차별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사용자의 통제를 돕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이루는 과제다.

여성 보호를 내세우며 이주민과 난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정치에도 반대해야 한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선동이 보여 줬듯, 극우 등 우파 정치인들은 여성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여성 대상 폭력을 인종차별 선동의 소재로 이용할 뿐이며, 이런 속죄양 삼기는 지배자들에게 피해자 지원 예산을 깎고 성평등 정책을 공격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는 수단이다. 여성을 가장 자주 위협하는 것은 낯선 이주민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의 남성이다. 국적을 이유로 한 적대는 이주 여성을 더 고립시키고, 안전을 요구할 권리마저 국적에 따라 가른다. 가해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모든 여성의 보호와 노동권은 출신국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함께 벌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 대상 폭력을 없애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가족과 노동시장, 국가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다. 사회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이 아니다. 당장 오늘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내일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오늘의 투쟁이 곧 사회를 바꾸는 투쟁이다. 지금 필요한 안전과 소득, 주거와 돌봄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삶보다 이윤과 통제를 앞세우는 체제 자체에 도전할 힘이 생겨난다. 여성 해방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산과 돌봄을 조직하는 사회, 곧 자본주의를 제거한 사회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사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가 여성 해방의 척도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s.or.kr/join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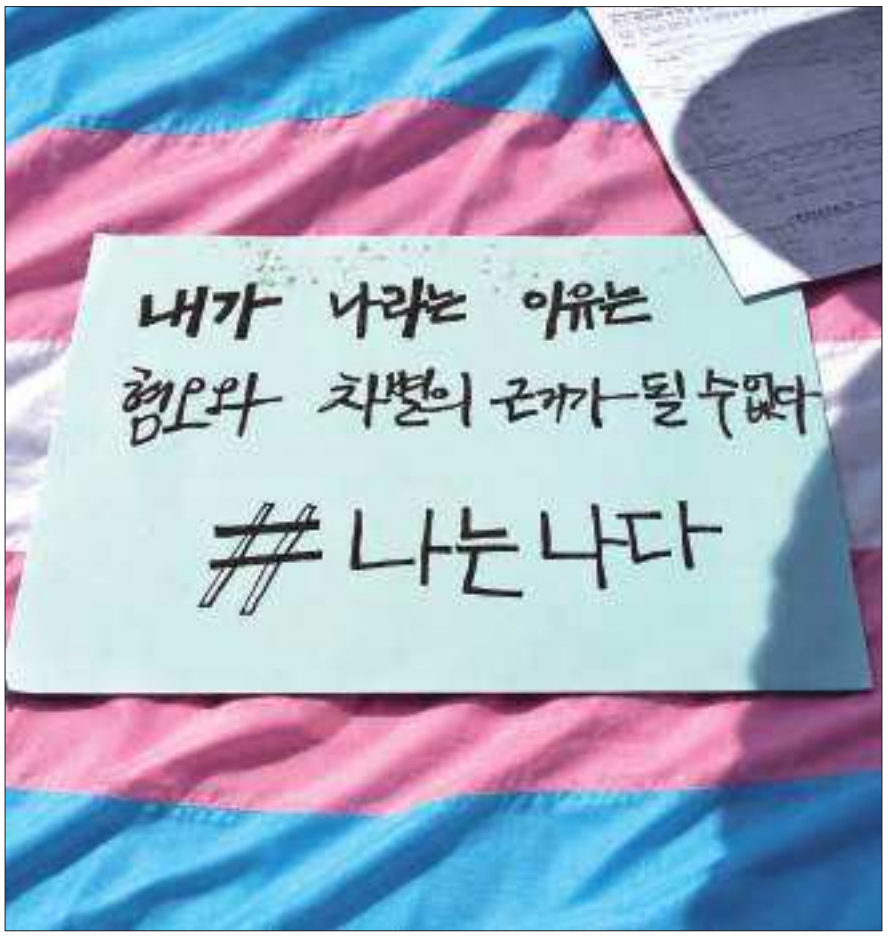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이란 전쟁과 한국의 참전 문제
인공지능(AI) - 희망, 거품 혹은 재앙?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71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말한다

# “함께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실제 삶을 봐 주면 좋겠어요”

**이민호 군**(18세, 가명)은 자신을 소개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빨갱이’ 트랜스 청소년”이라고 웃으며 소개했다. 트랜스젠더 남성인 그는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법적 성별 정정, 비싼 수술비 등 곳곳이 장벽인 트랜스젠더의 삶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불편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100퍼센트 설명이 안 됐어요. 고정관념을 벗어난 여성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도 불편했거든요. 특히 출석번호나 화장실처럼 단순히 성별을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설명을 읽었어요. 그때 “아, 이거였구나” 싶었죠. 너무 명료했어요. 이제야 설명이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 오히려 제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젠더를 365일 내내 강하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성별 불일치감을 느끼지 않는 순간들을 제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종교의 영향도 컸어요. 저는 가톨릭 교리를 사상체계로서 상당히 진지하게 탐구하고 지지했거든요. 교리에서는 트랜지션을 죄로 여기니까 그것도 제 정체성을 부정하고 싶은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끔 불일치감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외모 강박과는 달랐어요. 전형적으로 예쁜 여성이든, 여성의 외모 규범에서 벗어난 모습이든, 여성의 범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성별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종교에 대한 회의를 거쳐 무신론자이자 유물론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더는 제 성별 정체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결국 제가 트랜스젠더 남성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와 그만둔 뒤의 생활은 어땠나요?**

제 정체성을 받아들인 뒤에는 오히려 성별 불일치감을 느끼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커밍아웃도 하고 해방감도 느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컸어요. 이전처럼 여자아이들과 어울리기는 힘들어졌고, 그렇다고 남자아이들 무리에 들어가기도 어려웠어요. 제가 축구를 엄청 잘하거나 게임을 아주 좋아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편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도 어울리기가 애매해서 외로웠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는 저를 지지해 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커밍아웃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친구도 있었고, 이미 그럴 것 같았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친구들과 모두 떨어졌어요. 새 학교는 여러모로 커밍아웃하기 곤란한 환경이었고, 더는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려움이 더 커졌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교를 나온 뒤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에도 처음에는 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처럼 성별 구분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을까 봐 걱정됐거든요. 개명하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야 갈 용기가 생겼어요.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곳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었어요. 상담도 꾸준히 받았고, 바인더(가슴을 압박해 외형을 조정하는 의류) 같은 물품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단지 상담이나 물품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제 젠더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안도감이 있어요. 오프라인 공간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도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법적 성별 정정을 마쳤다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 과정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싸우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제 정체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뒤에도 ‘꼭 지금 트랜지션을 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지셨어요. ‘그런 건 성인이 돼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법적 성별 정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불확실성이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죠.

처음 신청한 게 올해 4월이었어요.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생각하면 7~8월쯤에는 끝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뒤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심문 기일을 정한다는 연락도 없고,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구도 없었어요. 그냥 판사가 서류를 받아 놓고 ‘잠수’를 타버린 거죠.

한국에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따라 판단과 처리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결국 다른 법원을 알아봐야 했어요. 어떤 판사가 성별 정정에 우호적인지 알아내기 위해 판사 인사 이동 자료를 찾아보고, 과거 판결 이력도 대조했어요.

▶ 10면으로 이어짐

용어설명

**트랜지션**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행하는 사회적·의료적·법적 변화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 9면에서 이어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찾았죠.

서류 준비도 어려웠어요. 법원에 제출하는 인우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주변 사람이 제가 실제로 남성으로 살아왔다는 사실 등을 보증하는 서류예요.

그런데 보증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등본까지 요구되다 보니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성년자인 지인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도 있었고요.

첫 번째 법원의 지연 때문에 제 인생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어요.

원래 올해 수능을 보려고 했거든요. 법적 성별 정정이 수능 접수 전에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접수 이후에야 끝났어요. 법적 성별 정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지원하면 나중에 아웃팅(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별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학에 지원하지 않기로 했죠.

막상 완료됐을 때는 처음 제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처럼 신나거나 해방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병이 나은 느낌에 가까웠어요.

뭔가 플러스가 생겼다기보다는 마이너스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몸이 아프다가 나으면 특별히 신난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도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혐오 선동이 등장했는데요.**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우익이 해외 극우의 주장을 수입해 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일이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그렇고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도 결국 한국에 들어왔구나 싶었죠.

그런데 저는 극우의 혐오 선동 자체보다 민주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훨씬 심하게 성소수자를 공격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공격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이런 혐오 선동을 제대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 침묵이 훨씬 더 큰 위협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있는 성소수자 친구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전의 학교는 성소수자가 당연히 배제되는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색출하거나 직접 억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학교가 완전히 검은색이라기보다는 '짙은 회색 지대' 같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검은색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공격하고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공격을 보면서 사람들까지 혐오를 더 편하게 표현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 주세요.**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실 트랜스젠더를 너무 추상적으로 다룬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젠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수행되는지,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권리가 무엇인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의료적 트랜지션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진 이미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에서는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은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는 이유는 단지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신체에 불일치감을 느끼고, 스스로 필요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만난 트랜스젠더들 중에도 가장 큰 걱정이 수술비인데, 정작 수술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운동 단체를 찾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뿐 아니라 의료적 트랜지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문제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트랜스젠더 당사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요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을 분명히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중에는 그냥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에서는 성별 이분법을 해체하자는 이야기가 강조될 때가 있죠. 그런 논의가 자신의 가장 절실한 필요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운동과 거리를 느끼는 트랜스젠더들의 요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거리에서 깃발을 드는 것만이 운동은 아니잖아요. 익명으로 글을 기고하거나, 다른 트랜스젠더를 위해 기부하거나, 단체 내부에서 함께 토론할 수도 있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안전하게 참여할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트랜스젠더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법률적 쟁점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트랜스젠더라는 속성을 자신의 수많은 특성 중 하나로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노동운동을 할 때 미래의 사회 변화뿐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노동조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트랜스젠더 문제에서도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중에서도 자주 잊히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함께 고통받고 있고,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정리 양효영**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재명 정부의 개각 **미국이 싫어한 정동영은 교체, 개혁 염원 대중이 싫어한 위성락은 유임**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왜 반복되나**

★ '커닝' 신고 포상금 1억 원, 응시 제한 최대 10년 **정부의 위선적 엄벌주의**

★ **국제사법재판소(ICJ), '미얀마가 로힝야족 인종학살 자행' 판결 — 이스라엘·미국의 미래?**

★ **기업 지원·군비 증강엔 수십조, 근속수당은 500원 인상 … 학교 비정규직 파업 나선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EU: 쇠락하는 두 이류 제국주의의 다툼과 딜레마**

★ **일본인 청년 사회주의자가 본 영화 〈호루몽〉**

## 프랑스 유학생이 말하는 프랑스 반란

# 진짜 폭력은 국가가 휘두른다 — ‘봉기할 권리’ 외치는 청년들

**러흐 메핼** 프랑스 유학생

프랑스에서 [9월] 새 학년이 시작된 뒤로 고등학생들이 이끄는 운동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뒤이어 대학생들과 더 넓은 사회운동의 상당 부분이 그 운동에 가세했다.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진 항쟁들의 뒤를 잇는 이 투쟁은 세계 도처 청년들의 행동을 고무했다.

이 글에서 나는 분노의 원인, 운동의 요구, 조직 방식, 국가의 대응, 운동의 가능성을 설명하려 한다. 여기서 인용하는 수치는 2026년 11월 중순의 것이지만, 수치는 거의 날마다 바뀐다. 수치들은 출처가 있지만 추정치인 경우도 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위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이미진



사진 출처 GuySmallman

“평등은 늘리고, 짭새는 줄여라” “인생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다”

## 무엇이 분노를 낳았는가

먼저 프랑스의 학교 교육을 잠시 설명하겠다. 프랑스의 학교 교육은 역사적으로 무상 공립학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26년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82퍼센트가 공립 교육 기관에 다닌다. 그러나 국가가 교육 투자를 줄이면서 사립 부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립의 비중이 21퍼센트에 이른다.

운동은 파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인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시작됐다. 올해 8월 31일 마요트에서 학생들이 노르 고등학교를 봉쇄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지극히 형편없는 교육 환경을 규탄하며 학교 봉쇄에 동참했다. 이 학교는 2024년 섬을 휩쓴 사이클론 ‘치도’ 이후 지금까지 망가진 채로 있다. 이렇듯 프랑스의 해외 영토에서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1년 내내 더운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고, 열대 기후 탓에 건물이 더 빨리 낡고, 교사가 빠져도 충원되지 않고, 등하교 대중교통도 형편없다. 식민 지배의 유산으로서, 이 지역들은 오늘날에도 프랑스 본국으로부터 방치돼 있다. 운동 내에서조차 그곳에서 운동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 프랑스 본토의 1968년 5월 항쟁에 앞서 일찍이 1967년 과들루프에서 노동자들이 이끈 항쟁이 있었다.

프랑스 본토에서 운동이 불붙은 것은 9월 21일 파리 교외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가 봉쇄되면서부터다. 이후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의 처지는 정확히 어떠한가? 먼저 교실이 과밀하다. 학생 모두가 앉을 책상과 의자조차 모자랄 정도로 학습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교사가 결근하면 대신할 교사도 없다. 올해 새 학년이 시작될 때 학교 둘 중 한 곳은 교사가 모자랐다. 해마다 수업 시간의 10퍼센트가 평크가 난다. 나 자신도 고등학교에서 6개월 넘게 역사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학년 말에 [대입 자격시험] 바칼로레아를 쳐야 했는데 말이다. 학교에 사회복지사나 보건 교사도 부족하다. 어떤 학교는 화장실에 화장지도 비누도 없고, 많은 건물이 비위생적이다. 복도에는 쥐와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고, 물이 새고,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된다. 올여름 프랑스에서는 기온 측정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폭염이 닥쳐 8,000명이 숨졌으니 더욱 심각한 문제다. 결국 6월에 학교 2,000곳이 문을 닫아야 했고, 전체 6만 곳 가운데 1만 곳이 섭씨 40도를 넘기 일쑤인 극한 기온 때문에 며칠 동안 수업 시간대를 변경해야 했다. 전통적으로 초여름에 치르는 바칼로레아 같은 시험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형편없는 물질적 여건의 근저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데올로기다. 몇 년 전의 고등학교 개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인 선택 과목으로 이뤄진 ‘맞춤형’ 체제가 도입됐다. 그 탓에 시간표가 엉망이 되고, 수업이 없는 시간대로 시간표가 숭숭 구멍나 일과 시간이 늘어지기 일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칼로레아 개혁으로 상시 평가가 도입됐다. 고등학교에서 받는 모든 성적이 대입에 반영돼 학생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그 결과 도처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공동체로서의 학급이 해체되고, 저마다 각종 능력을 입증하는 포트폴리오를 쌓는 극도로 개별화된 교육이 자리 잡았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교육에 적용된 결과이고 유럽연합의 교육 정책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의 목표는 끊임없이 불안정한 세계에서 적응력 있고, 유연하고, 다재다능하고, 고용될 만한 개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 원래 프랑스 학교 교육의 목표였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길러 내는 일에서는 손을 놓게 됐다.

고등학교 과정 끝에는 ‘파르쿠르쉽’이 있다. 파르쿠르쉽은 고등교육 기관 입학을 위해 학생들을 줄 세우는 플랫폼으로 학생을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고, 선발 과정도 부조리하다. 자기소개서 대신 쿠키 조리법을 써 낸 사람이 합격한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원이 크게 모자란다. 단적으로 2026년에는 지원자의 18퍼센트, 곧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한 곳 어디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 예전에는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 학위 과정 어디에나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부족은 의도적으로 조직된 것이고, 거기서 득을 보는 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립 학교들이다. 이것은 공립 대학에 대한 공격이다. 공립 대학은 지식을 집단적으로 쌓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장이자, 신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지식의 상품화에서 벗어나 있는 대항 권력이다. 대학 입학 후에도 경쟁은 이어진다. 프랑스에서 많은 일자리가 필수로 요구하는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서도 경쟁은 계속된다.

이어서 학생들의 요구, 운동의 조직 방식과 규모, 탄압과 당국의 대응, 노동자 파업과 투쟁의 결합, 언론과 극우의 공격, 반란의 전망 등을 다룬 전문을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ws.or.kr/subs2




# 국회 절차 밟는 이란 전쟁 파병 — 실질적인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

11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해부대 확대 파병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파병안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전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님을 애써 강조했다. 김병주는 '전쟁 불관여' 약속을 파병안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국힘 의원들은 파병안을 지지하면서도 그 정도로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트럼프가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더 확실하게 도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힘과 민주당 모두 불안정해지는 중동의 주요 해상 교통로에 걸린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지키고 거기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다.

정부의 파병안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돕는 것이다. '전쟁 불관여' 약속이 파병안에 명시된다 한들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이번 파병안은 청해부대 병력을 20퍼센트 이상 늘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해상 초계기와 기뢰를 제거하는 무인 소해 전력을 추가하고,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 앞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사진 조승진
이재명의 '전쟁 불관여'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된다

## 전쟁 관여

청해부대 작전 구역이 미국의 대이란 봉쇄선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전쟁은 봉쇄선 밖에서도 치열하게 수행되고 있다. 미군 항공모함은 폭격을 피해 봉쇄선 바깥 아라비아해에서 대이란 작전을 펴고 있다. 봉쇄선을 빠져나간 이란 선박을 저지할 군함들도 여럿 배치돼 있다.

확대된 청해부대 작전 구역의 북쪽 기준점인 두큼항은 미국 항공모함이 정박하는 거대 항구이자 대이란 전쟁을 위한 미국의 주요 병참 거점이다. 그래서 이란도 이번 전쟁 중에 이미 여러 차례 두큼항을 공격한 바 있다.

이런 곳에서 청해부대가 미군과 정보 교환 없이 제대로 활동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정보 교환은 상호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고, 한국군 또한 미국에 대이란 전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해상 초계기가 전력에 추가된 까닭이다.

전쟁 수행의 범위는 직접적인 교전 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별 군사행동의 성격은 그것이 전쟁 전체에서 하는 구실에 비춰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전쟁 불관여 약속은 어불성설이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가 제기된 이래 이재명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착착 파병을 준비해 왔다.

파병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뤄진 미국 당국과의 숱한 협의, UAE에서 이뤄진 현지 조사는 애초에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파병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김병주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파병에 끝까지 반대할 듯한 말을 해 왔다. 10월 1일에는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의 기자회견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참가해 "우리 장병을 전쟁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연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파병안을 옹호하면서, 참전 우려를 불식시킬 '약속'에 관해 말하고 있다.

전쟁 반대 운동 일각의 주장처럼 이재명 정부에 '약속을 지키라'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전쟁 불관여 약속'은 계속해서 전쟁 관여를 은폐하는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전쟁 불관여' 명시를 거론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11월 23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동의안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수정안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정부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할 여지를 보인 것이다.

사실 조국혁신당은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을 지지하면서 작전 확대에는 반대하는 불철저한 파병 반대 입장이었다. 그런 견지에서 김준형 원내대표는 기존 작전의 연장과 확대를 분리해서 표결할 것을 촉구해 왔다.

진보당은 김준형의 이러한 방안에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11월 18일 진보당 김종훈 위원은 국방위원장 진성준과의 면담에서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 연장과 확대를 묶어서 표결하는 것을 정부안이 가진 중대한 결함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이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며 조국혁신당 등과 발의한 파병 반대 결의안도 계류 중이다.

돌아가는 상황 전반이 민주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이란 전쟁 파병(참전)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파병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중요하다.

이원웅

